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

(의안번호 제207호)

○ 2001. 7. 20.

○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7. 19. 정길자 의원외 13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1. 7. 20.

다. 상정일자 : 2001. 7. 20.

라. 위원회 개최일수 및 회수 : 제113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1회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일본정부가 다음 세대를 주관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정확한 역사관 확립을 구축해 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한일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은폐·축소·왜곡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며, 강력하게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운동 전개
- 일본대사관등 관련기관 항의 방문
- 스기나미구의회에 우리구 입장 전달
- 성명서 발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환)

가. 검토내용 : 생략(검토보고서 참조)

나. 검토결과

- 일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일제침략이 조선근대화와 동남아해방에 기여했다는 뉘앙스나, 가해사실을 가능한 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도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태평양전쟁은 여전히 '대동아 전쟁'이고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과거미화 사관은 변함없이 왜곡·축소표현되었고, 군대위안부 관련사항은 고의로 누락시켰음.
- 7월 9일 일본정부가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정부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검토결과를 공식 통보 해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긴급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기로 하였음.
- 일본 도치기 현 시모쓰가 교과서채택 지구결정에 대해 산하 10개 기초단체중 오히라마치와 미부마치, 노기료마치, 오야마시는 7월 17일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채택 결정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앞서 후지오카와 고구분지는 16일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음.

□ 검토의견

일본정부로 하여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내용중 과거사에 대한 은폐·축소·왜곡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도록 40만 서초구민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전개하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향후 활동 방향이나 시민단체와 연계방안은 추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주요골자중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무역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에

답>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은 없으나 특위에서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탄력적으로 전개할 것임.

질>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로 인하여 외교분쟁이 야기되고 있는데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는 없는지?

답>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돌출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6. 수정안의요지 : 관내시민단체와 연계 운동전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